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일부인용」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구 ○○○대로○○(○○동) ○○○백화점 번지앞 ○○○판매점(이하 ‘이 사건 업소’ 라 한다)에서 담배소매점을 운영하는 자로써 청구인의 종업원은 20○○. ○○.경 청소년 임○○(15세)에게 신분 확인을 하지 않고 담배 ○○○갑(○○○○, ○○○○, ○○○○ 각1갑)을 판매한 행위로 인천○○경찰서에 적발되었다. 이를 통보받은 피청구인은 20○○. ○○. ○○. 청구인에게 「담배사업법」 제17조 위반을 사유로 영업정지 ○○○개월을 사전 통지하였고 20○○. ○○. ○○.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개월(20○○. ○○. ○○. ~ ○○. ○○. ○○.)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

###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청구인은 ① 몸이 불편하여 종업원을 고용하여 담배를 판매하여 왔으며 종업원은 절대로 미성년자에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한다는 점, ② 지난 연말 어려보이는 젊은이가 담배를 사러온 적은 있으나 판매하

지 않았고 이후 경찰관하고 동행하여 이 사건 업소에서 담배를 구매하였다고 주장한 점, ③ 경제적 어려움과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점을 참작하여 억울함에 대한 반영이 전혀 되지 않은 행정처분이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고 주장한다.

###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청구인의 종업원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담배소매인영업소에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해야 하며,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영업정지 ○○개월을 명할 수 있지만, 피청구인은 청문을 통해 청구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청소년에 대한 담배 판매가 1차 적발임을 감안하여 영업정지 ○○개월로 감경하였으므로 단지 억울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 가. 관계법령

담배사업법 제17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

#### 나. 사실관계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련자료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구 ○○대로○○(○○동) ○○백화점 번지앞 ○○판매점에서 담배소매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2) 청구인의 종업원은 20○○. ○○.경 청소년 임○○(15세)에게 신분 확인을 하지 않고 담배 ○○갑(○○○○, ○○○○, ○○ 각1갑)을 판매한 행위로 인천○○경찰서에 적발되었고 20○○. ○○. ○○. 인천○○경찰서장은 이 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3) 위 2)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인천지방검찰청은 20○○. ○○. ○○. 청구인의 종업원에게 벌금 ○○만원의 구약식 명령하였다.

4) 위 2)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통보받은 피청구인은 20○○. ○○. ○○. 청구인에게 「담배사업법」 제17조 위반을 사유로 영업정지 ○○개월을 사전 통지하였고 영업정지처분에 따른 청문실시 안내를 통지하였다.

5) 청구인은 20○○. ○○. ○○. 청문에 출석하여 종업원의 진술서를 포함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6) 피청구인은 의견제출서를 반영하여 20○○. ○○. ○○.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개월의 ○○분의 ○○을 감경한 영업정지 ○○개월(20○○. ○○. ○○. ~ ○○. ○○.)의 처분을 하였다.

## 다. 판 단

### 1) 먼저,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1항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있고, 제4항에서는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제4호 가목에는 청소년유해약물에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가 규정되어 있다.

「담배사업법」 제17조제2항에 의하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때에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4항에 의하면 1차 위반시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위반행위의 내용·정도·동기·기간·횟수 및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 등을 참작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청구인은 담배소매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인천지방검찰청의 처분결과와 인천○○경찰서의 입건통보에 의하면 사건당일 청구인의 종업원은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여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피의사실은 인정되고 이를 사유로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벌금 ○○만원의 구약식 명령을 받은바 이 사건 위반행위가 인정된다.

나)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사업자, 명의자 등 책임자는 반드시 현

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업소 종업원들의 행정법규 위반행위로 인한 행정책임을 져야 하며 종업원의 법규 위반행위를 알지 못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18726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이 사건 위반행위를 방지하지 못한 이상 청구인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다) 다만, 인천○○경찰서의 인허가범죄 입건통보에 의하면 이 사건의 청소년이 담배를 구입한 날짜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점, 청구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점, 청구인의 심장수술에 따른 건강상태와 다리가 불편하여 거동이 힘든 점, 협소한 가판대에서 담배사업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점, 경제적 어려움과 가족문제로 현재 ○○세의 나이로 혼자서 주거를 영위하는 점, 동일 위반 전력이 없고 처음 위반 행위를 한 경우로 위반의 내용·정도 등이 경미하여 이 사건 처분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보다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크다 할 것이어서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